

## ‘창조경제시대’ 대비 기술경쟁력 배양 시급



김국진  
건설경제신문 기자

“건설경기가 어렵다.”

건설인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다. 과거 국토교통부의 한 건설담당 국장이 “건설인들마다 ‘어렵다’고 한다. 건설산업이 언제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렵다’는 말이 업계의 습관적인 뉘etur리로 평가절하 되면서 최근에는 “진짜(정말)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건설단체장들의 연설 문구도 “수십 년간 어렵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과거와 판이하게 다른 위기다”로 바뀌었다.

업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부사 한두 개가 추가된 것 이상이다. 양치기 소년이 진짜 늑대를 만난 격이다.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올해와 내년의 수주액은 2007년(127조9,000억원)의 민간수주액(90

조8,000억원)과 다를바 없는 90조원대 초반이다. 물가까지 감안한 불변수주액은 작년 73조9,000억원이고 올해와 내년에는 60조원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2조8,000억원)과 1999년(67조5,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경상수주액은 지금의 절반인 50조원 내외(1998년-47조9,000억원, 1999년-51조1,000억원)였다.

건설업계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현실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상황이 바뀔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강점있는 분야에 선택·집중하고 필요없는 부문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역량이다. 건

“ 박근혜 정부의 건설정책을 제대로 읽고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녹색성장의 최대 수혜자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건설업이 꼽혔다. 녹색성장과 일맥상통하는 창조경제의 주인공도 전문·설비·엔지니어링 분야의 중소건설사들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처럼 정책 브랜드는 다르게 포장해도 지향점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기계설비건설산업의 미래도 결국 이런 변화의 줄기를 직시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CEO들의 대응에 달렸다. ”

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몰락한 건설기업의 공통점도 불운(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부적절한 사업전략, 그리고 경영자의 실책이었다.

경영자 역량 중 으뜸은 정책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력이다. 건설산업을 ‘천수답(天水畓)’이라고 비하하지만 정책을 거슬러 성공한 건설기업은 거의 없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건설정책을 제대로 읽고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정부3.0, 비정상의 정상화 등과 달리 창조경제는 지금까지 모호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르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건설기업 CEO연찬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마저 가장 강조한 당부중 하나인 창조경제에 대한 준비였다.

창조경제의 주역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녹색성장의 최대 수혜자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건설업이 꼽혔다. 녹색성장과 일맥상통하는 창조경제의 주인공도 전문·설비·엔

지니어링 분야의 중소건설사들이다.

현정택 부의장은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 창조경제의 관건이며 건설기업도 이를 통한 융합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생활형 SOC와 유지관리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감소하는 건설수요의 내부에서 진행 중인 수요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라”고 충고했고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2000년대 이후 철도와 공항 쪽 성장에 주목하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 한계를 뛰어넘을 해외시장 진출도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어렵게 기술을 개발, 축적해도 혜택이 없다는 불만도 많다. 그러나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처럼 정책 브랜드는 다르게 포장해도 지향점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기계설비건설산업의 미래도 결국 이런 변화의 줄기를 직시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CEO들의 대응에 달렸다. 